

# SOC사업 ‘혈세낭비’ 실시간 감시

정부, 240兆 공공시스템  
‘부패방지 4대 백신’ 가동  
GTX·평창올림픽 등 대상  
사후적발→사전예방 전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평창동계올림픽 도로망 등 대규모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 구축된다. SOC 사업은 사업기간이 긴 데다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증액 가능성이 큰 만큼 상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예산 낭비와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핵심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16개 분야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 시스템에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번 대책은 부정·비리를 사후적으로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하던 기존 방식에서 운영 시스템 자체에 부패요인을 감시·경고하고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는 △실시간 부패 감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정보 상시 공유·연계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 등이다.

실시간 부패 감시는 대규모 SOC사업과 방위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사업은 사후에 부정·비리가 적발되더라도 복구가



황교안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려운 탓에 사업 착수 전 단계부터 별도의 검증팀을 구성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대상 사업을 보면 GTX 등 SOC 사업 12조7000억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5조7000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5조1000억원,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1조7000억원 등 총 25조원 규모에 달한다.

국무조정실 대형국책사업관리팀이 총괄 관리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와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의 경우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안전처에 별도의 검증팀을 두도록 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는 연평균 500여건의 입찰을 실시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구조개혁이 큰 줄기다. 철도시설공단 퇴직자의 재취업 제한 대상을 현재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계약처장 등 핵심 보직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외부전문가로 교체하도록 했다.

정보 상시 공유·연계는 국고보조금, 국가 R&D(연구개발) 연구비,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기준 60조원에 가까운 국고보조금 분야는 내년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19조원

수준의 국가 R&D 사업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세청 DB(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부정신청 사례를 자동 추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의 경우 부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와 규제 개혁 저해·부조리 개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4대 백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5조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 총리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예산 누수나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公共조달시장 내달부터 '중심제' 체제로 재편

# 지역·중소사 입찰기회 확대

조달청, 세부심사기준 마련  
중소 공동수급체 구성 배점  
시범사업 때보다 2배 늘어

공공조달 건설시장이 이르면 내달부터 최저가낙찰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중심제) 체제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를 위한 조달청의 중심제 세부기준안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입찰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건설업계의 치열한 고민도 본격화됐다. ▶관련기사 9면

조달청은 12일 대전 소재 본청 강당에서 건설사 및 관련 협회, 단체 등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기준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적용될 예정으로, 조달청은 이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연구용역 및 TF를 운영해 왔다.

또 지난해에는 평가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2건의 시범사업을 집행하는 등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최종 기준을 확정, 중심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조달청이 이날 선보인 기준안을 보면, 큰 틀에서 계약예규와 대동소이한 가운데 중소 및 지역건설사들의 입찰참가기회 확대방안이 배점으로 반영된 것이 특징적이다.

중소기업 참여도에 따른 공동

수급체 구성 항목 배점이 2점으로 현행 시범사업 대비 두 배 늘었고, 사회적 책임 가점 항목에서의 지역경제 기여도 배점도 0.4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는 중심제 도입으로 중견 이하 및 지역 건설사들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고 특정업체에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다소나마 중소·지역업체의 중심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시공평가 결과 및 배치기술자 평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어 당분간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기준안에 제시된 시공평가 만점기준(95점)을 완화해야 하며, 배치기술자 평가와 관련해서도 실제 업계 및 현장의 인력 현황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달청은 이에 대해 여타 발주기관과 달리 중소 및 지역사들의 동반성장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담고자 했으며, 설명회는 물론 개별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건설사들은 규모 및 대상공사별 입찰참가 조건과 계약사항, 강점 및 약점 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중심제 체제 하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봉승권기자 skbond@



# 지자체 발주 300억 이상 공사 '종합평제' 적용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추정 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종합평가나찰제(이하 종합평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1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자체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종합평가나찰제(이하 종합평제)' 시행 근거를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처리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는 시점은 오는 15일로 예정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말 입법에 고된 뒤 석 달 만에 의견수렴 및 규제·법제처 심사를 거쳤으며, 지자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찰자를 결정하는 '종합평가나찰제'를 올해부터 시행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해온 최저가나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해 담핑나찰과 공사품질 저하 등을 가중시켜 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여기에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 이외에 별도의 종합평제 입찰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종합평제의 제도개선 취지를 활성화하기

## '지방계약법령' 국무회의 통과

### 별도 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긴급입찰 공고사유 구체화 세부기준은 15일 이후 확정

위한 입찰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긴급입찰 공고사유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돼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계약이행 대가지급기간도 예산의 조기 집행 활성화를 위해 지급까지 '7일 이내'로 규정된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문화재 발굴공역의 수의계약 허용 범위를 공기지연 또는 정밀발굴조사 전환 시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18일 '종합평가 나찰자 결정기준 제정안 설명회' 이후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기로 한 종합평가나찰제의 나찰자 결정 세부기준(예규)을 15일 이후에 확정·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에서는 △40% 수준의 과도한 지역업체 참여도 만점 기준 △발주처의 형식적인 시공품질평가 결과의 점수 반영 등의 개선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의견 반영이 이뤄진 지방계약예규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특히 입찰심사에서 동점이 나오면 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입찰가도 같으면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기로 한 데 대해 안전·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닌 발주처의 원가절감을 목표로 한 제도개선이라는 지적에 대한 해법 마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령은 15일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며 "조달청 등에서 제시한 입찰평가위원회 설치 등을 수정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규는 15일 이후에 확정하게 될 예정이지만, 주요 내용은 현재도 검토하고 있으며 발표 시기는 15일 이후에 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현용기자 je8day@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에서 참석 국무위원들이 화상을 통해 황교안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

# 교량·터널 등 고난이도 공사, 물량심사 통해 '가점 1점'

## 뉴스 돋보기

### 조달청 종합심사제 세부심사 기준안

조달청이 내놓은 종합심사나찰제(이하 중심제) 세부심사기준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계약예규 범주 내에서 마련됐지만 공동수급체 구성과 고난이도 공사 물량심사 가점 등 일부 항목과 배점은 차별성이 눈에 띈다. 중소·지역건설사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고난이도 공사에 대한 물량심사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준안에 따르면 우선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은 공사수행능력 50점, 입찰금액 50점, 사회적 가점(1점), 계약신뢰도(감점) 등으로 구성된다.

수행능력을 보면, 일반공사의 경우 전문성 항목에서 시공실적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5점, 배치기술자 10점이 적용되고 역량 항목으로는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3점, 공동수급체 구성 2점이 각각 만점이다.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이 포함되거나 실적경쟁 입찰이 적용되는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인력(15점)이 시공실적을 대신할 수 있고 동일공종 전문성은 7점, 배치기술자는 7점이 각각 적용된다. 또 규모별 시공역량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또 시공평가결과 항목의 만점기준은 95점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자료를 활용해 2015년 1월1일 이후 결과만 평가하기로 했다.

### 사회적가점 항목별 배점 조정 지역경제기여도 0.4점으로

### 배치기술자 평가 기준일 입찰공고일로 변경 요구와 시공평가만점기준 완화 등 업체 간의 미반영... 논란 지속

가장 특징적인 항목은 역시 공동수급체 구성 배점으로, 종전 시범사업에 적용했던 것보다 2배로 늘었다.

중소기업의 참여도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져 활발한 공동도급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다만 만점기준은 25%이하 5% 단위 차등로, 종전 30% 기준에 비해서는 소폭 낮아졌다.

조달청은 이와 더불어 사회적가점 항목별 배점 조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입찰참가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가점 1점 중 지역경제기여도를 0.4점으로 늘리고, 나머지 건설인력고용과 건설안전, 공정거래 등에는 각각 0.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사의 각 지분별 지역사 참여도를 계산해 20% 이상이면 0.4점 만점을 받을 수 있어 중소, 지역사들의 참여도는 다소나마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배치기술자 및 시공평가 만점기준은 앞으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배치기술자 평가에서 기준일 입찰공고일로 변경하고, 시공평가 만점기준을 90점으로 완화해 달라는 건의사항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공동수급체 및 지역경제기여도 배점 상향조정만으로는 중견이하 건설사들의 활발한 참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외 입찰금액 배점 50점을 보면, 일반공사의 경우 단가 -4점과 하도급계획 -2점 등으로 시범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교량과 터널, 항만, 지하철, 전자선로, 철도신호, 폐기물매립장 등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에는 물량심사를 통해 감점 2점과 가점 1점이 부여되고, 시공계획심사(-2점)가 집행된다.

특히 물량심사 가점 1점은 고난이도 공사에 대한 물량내역 수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달청이 새로 도입한 항목으로, 감점 및 가점을 합산해 최종 적용 배점을 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내부 1명, 수요기관 1명, 외부위원 7명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집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또한 계약신뢰도(감점) 평가를 통해 각종 계약 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감점 대상은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과 하도급 계획 위반, 시공계획 이행 위반 등으로, 수요기관으로부터 위반사항을 통보(확정받은 날)로부터 2년간 조달청 집행종심제 대상공사 입찰에서 건당 각 0.05점씩 감점할 방침이다.

봉승권기자 sksbong@



# ‘간접비’ 모른 척하는 발주처... “지급기준 없다” 핑계만

(工期연장 추가비용)

## 글 쓰는 순서

1부 왜 '규율, 민관'인가

### 2부 건설산업 발목 잡는 규제

- 상제값 보장 안하는 각종 제도를
- 불안정, 품질 위협하는 제도·관행
- ④ 발주처 갑질은 진행형

공기연장으로 늘어난 간접비를 둘러싼 발주처와 건설사 간의 분쟁과 소송은 해묵은 논쟁거리다.

건설공사에서 시공사 탓이 아니라 발주처 관행 문제로 말미암아 공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될 경우 현장사무실 유지비용과 같은 공사 간접비가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논쟁거리다.

건설사들이 이에 대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2012년 전후다. 이 전에도 간접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감수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자비로 갈수록 공사현장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이 부문을 감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또한 발주처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반영하지 않으면서 공사가 무한정 지연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도 이유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사별로 다수의 간접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가 되자 일부 발주처들은 간접비 소송을 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는 '갑질'을 하기도 했다.

### 정산기준 마련 중... 굽지 않은 시선

연이은 소송에서 건설사들이 이기고,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간접비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 간접비는 지급해야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간접비에 대한 논쟁은 지급 여부에서 지급 규모로 옮겨간 상태다.

발주처들이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내놓는 핑계 가운데 하나는 '주고 싶어도 얼마를 줘야 하는지 지급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 ‘패심죄’ 무서운 건설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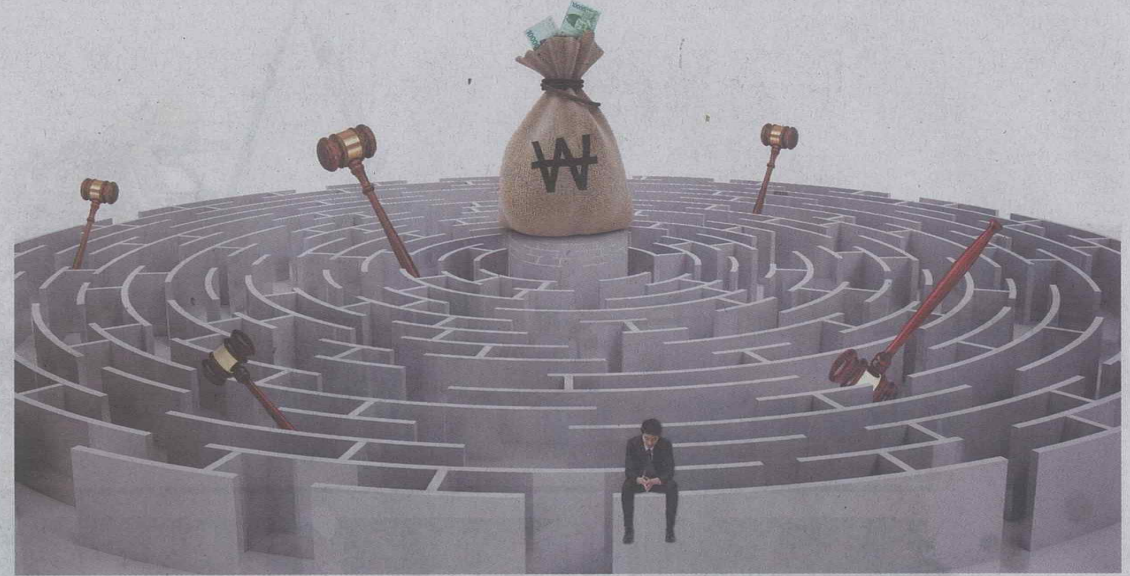
## 소송 제기 했다 트집 잡히기 일쑤... 결국 백기

지난해 국내의 한 대형 건설사는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간접비 청구 소송을 취하였다. 이어 공사를 함께 한 공동도급사들과 다른 공구를 시공한 또 다른 대형 건설사도 소송을 취하였다.

이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발주처인 건설사에 주야 할 간접비를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주처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현상이었다. 공정위 판단까지 있었지만 소송 가능성이 컸지만, 소송을 중도에 취하한 이유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발주처의 '압력'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처가 소송을 제기한 건설현장의 공사감독을 강화해 부실 발점을 매기고, 해당 건설사 인직원들의 발주처 출입을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받지 못한 공사비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에 대한 발주처 소송이 제기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건설업계는 전했다. 소송이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을 운용하기도 하지만, 소송을 당하면 이에 대한 보



### 건설사 피해 커지는데 정산기준 마련 하세일 국토부 연구용역 중에 기재부 또 용역 시행 지연

### 소송으로 가라는 발주처 최종 판결까지 수년 걸려 보상받은 업체 아직 없어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원(KDI)에 연구용역을 뒤 공기연장 간접비 정산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한 건설업계의 사선이 굵지 않다.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정산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했는데 기재부가 또 다시 용역을 시행하면서 정산기준 마련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간접비 지급을 미루려는 '말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간접비 정산기준 마련을 위해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실시한 데 이어 기재부가 또다시 연구용역에 나선 것은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법령과 계약에규에서도 간접비를 산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데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행정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 발주처 '소송으로 해결하자'

발주처가 간접비 지급을 미루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총사업비관리지침'이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증가를 억제하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통해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발주처들이 기재부와 협의의 총사업비 협의를 꺼리게 되면서 발주처가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처들이 기재부의 의지를 무시하고 있다”며 “주고 싶어도 이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말까지 한다”고 말했다.

간접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발주처의 책임 미흡 때문이라고 업계는 말한다.

소송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최종 소송결과가 나와야 징계를 할 수 있다며 소송으

로 가라는 식의 답변만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소송비용은 물론 패소할 경우 미지급 간접비에 대한 이자까지 물어야 하지만, 책임있는 행정을 하기보다는 형식주의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송의 경우 몇년이 걸리기 때문에 간접비 소송에 대한 대비의 첫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간접비 관련 소송 가운데 가장 처음 이슈가 됐고 진행속도가 빠른 건이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인데 이에 대한 대비원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례가 첫 대비원 판결인 만큼 소송을 통해 간접비를 받은 건설사는 아직 없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석기자 jskim@

### 발주처 '갑질' 뿌리뽑기 나선 국토부·공정위

## 공정위 “불공정 관행 철폐” 과징금 부과 국토부 “발주시스템 개선” 예방에 무게

공공 발주기관의 '갑(갑)질'에 대해 정부가 마냥 순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통한 사후 제재에 초점을 맞췄다면 국토교통부는 발주시스템 개선을 통한 '예방'에 무게를 뒀다.

먼저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나서서 건설산업 발주 시스템의 최정점에 있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손봤다. 2014년 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건설사 등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해 154억4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지난해에도 두 차례 발주처의 갑질을 제재했다.

과징금 규모로 보면 지난해 1월 한국도로공사(LH)와 수자원공사에 대한 과징금 156억3000만원이 가장 컸다. LH는 공사비 부담 삭감의 전횡인 '단가 후려치기'로 제재를 받았다. 건설사의 사전에 협의한 설계변경 단가 대신 낮은 단가 기준을 적용하거나 공사비를 일괄적으로 깎은 혐의다. 2010~2013년 LH가 대금을 삭감한 공사는 23건, 공사대금은 23억1300만 원이었다. 공정위는 LH의 공사비 부담 삭감, 부담 지원 행위 등에 대해 146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수자원공사도 2008년 주입담 여수수 공사 등 턱기(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와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무차별적으로 단가 후려치기를 했다. 적발돼 10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에는 국가 공기업에 이어 지방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철폐를 가했다. 경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울산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9개 지방 공기업은 공사비를 부담 삭감하거나 지원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갑질을 했다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국가와 지방 공기업 가리지 않고 발주처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왔던 실태가 공개된 것이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실공단은 공사대금 부담 감액, 간접비 지급 청구권 원천 차단, 과태료 전가 등 이른바 '불공정거래 3종 세트'가 적발돼 업계의 반목을 샀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79억3200만원에 그쳤지만 발주처 갑질의 전횡을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토부는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메스를 뒀다. 공정위 조치를 통해 불공정 행위가 드러난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4대 공기업과 논의를 거쳐 지난해 9월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내놨다.

개선방안을 통해 공사비 부담 삭감의 원인이 됐던 공기업의 내부 규정을 삭제하고,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산정 방식도 설계금액의 ±2~3% 내로 운영키로 했다. 터널공사 가격차량 운영비 등과 같이 발주처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건설사에 떠넘기는 관행도 없애기 위해 내부 지침을 바꿨다. 소송, 클레임, 손해배상 등 발주처에 대한 시공사의 정당관한 행사를 원천봉쇄했던 부담 특약도 손보기로 했다. 아울러 설계, 감리 등 건설기술인력 분야에서 관행화된 '대가 지급 없는 업무'도 금지키로 했다.

국토부-공정위 공조를 통한 '발주처 갑질 뿌리뽑기'는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부처 공기업의 동향 속도가 느리고 건설현장에서도 철폐를 가했다. 경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울산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9개 지방 공기업은 공사비를 부담 삭감하거나 지원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갑질을 했다

김태형기자 kth@